2023년 12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 개최

o 일시 및 참석인원

일 시	참 석 인 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편성시간 변경
바로보는TV 옴부즈맨	본방송 매주 일요일 03:40~04:10 (재방송 매주 월 00:20~00:50)	2023년 12월 31일 <송년특집> 아듀 2023 [23시+ 24시+ 옴브즈맨] 통합 - 본방 : 일요일 00시 20분 - 재방 : 일요일 26시 20분

o 방송현황

※ 프로그램 제목과 평가원 진술 주제를 3줄 이내로 기술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 고
박세진	12/3	[뉴스프라임] 북 GP 복원에 남 "상응조치"…한반도 긴장 고조 [뉴스포커스] 북, GP 복원 이어 JSA 권총 무장…한반도 긴장 고조	
김홍태	12/10	[뉴스10]'학생 책임' 담은 학교구성원 조례…시각차 분분 [일요와이드] 전기차 운전자 절반이 화재 걱정…"문 여는법 알아야"	
안지연	12/17	<일요와이드>워킹맘에 새벽·휴일근무 강요, 거절하자 채용거부…대법 "부당" 〈뉴스워치〉 유튜브 프리미엄 43% 올리다니…스트림플레이션에 부담↑	
박세진	12/24	[뉴스포커스]북한, 이틀 연속 탄도미사일 발사…한미 NCG 반발 [뉴스현장]윤대통령, 북 도발에 "한미일 공동대응 적극 추진"	
임윤주	12/31	[뉴스24]대통령실 "OECD 공공데이터 평가 연속 1위" [뉴스라이브]청년 절반 "자녀 필수 아냐"…저출산 새 통계지표 공개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변동사항 없음'

구 분	성 명	전・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 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변호사	2018. 06. 28	-
활동	임윤주	이화여대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연구원	2021. 11. 28	-
활동	안지연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총무이사	2023. 01. 31	-
활동	박세진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정보사회미디어학과 조교수	2023. 05. 31	-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붙임1]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3 12/3(일)	박세진	다음으로 2030 세계박람회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달 28일 저녁부터 29일 새벽 결과 발표 시까지 생중계를 통해 개최후보지 부산 현지의 반응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보도에서는 4시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엑스포 발표 당일 부산시의 현장 표정을 전달하는데 방점을 두고 방송을 준비하면서 상대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져 온 그 동안의 노력을 조

		유치 응원전 열기를 전하면서, 이번 행사에 1천여 명이 참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2014년 부산시가 최초로 엑스포 유치 의사를 밝힌 이후 다섯 달 만에 139만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면서, 엑스포 유치는 부산 시민의 9년간의 노력이 담긴 염원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정부와 재계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는 보도였습니다. 또한, 부산에서도 139만 명이 서명에 동참할 만큼 시민들의 열정이 대단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연합뉴스TV는 부산의 유치 응원전 현장 분위기과 함께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엑스포 유치를 바라는 부산 시민들의 간절함을 시청자들에게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유치를 위해 공을 들인 기간이나 참여 인원 등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한 점은 시청자들이 유치 노력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어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엑스포 발표까지 500여 일에 걸친 정부와 재계의 노력을 하나의 기사로 정리한 것에 비해 9년 동안 엑스포를 기다리고 준비해온 부산시와 시민들의 노고에 대한 부분이 작게 다뤄진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명하는 데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기자 현장연결을 통해 부산시가 처음 유치를 결정한 과정과 부산 시민들의 유치 열기 등을 전달하기는 했지만 이를 별도 리포트로 정리하지는 못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더 상세히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 12/10(일)	김홍태	지난 주 첫 소식은 지난 3일 뉴스10인데요, 기존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했다며, 교육부가 책임을 함께 규정한 학생 구성원 조례 예시안을 공개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앞서 교육부와는 별도로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등은 학생의 책무를 담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전했습	주신 의견 최대한 반영해서 후속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 간 충돌 지점이 교육현장에서 여전히 발생할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 돌아갈 것이라

		니다. 최근 교권침해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와 학부모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고려하여 균형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되, 교육과정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은 좀 더 분명하게 집고 갈 부분으로 보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교사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지자체별로 개별적인 교육환경과 상황을 고려한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 간의 협력과 학계,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개선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를 보호하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라는 점도 꼭 짚을 부분이었습니다.	점 충분히 주지하면서 보도에 임하겠습니다.
2023 12/17(일)	안지연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 인력의 증가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역 의대를 졸업한 젊은 의사들은 인턴 자리가 부족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13일, 뉴스현장에서 다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의대 졸업생 대비 모집하는 인턴 정원 비율의 지역 간 차이가 컸다고 전했습니다. 10년 동안 수도권의 의대 졸업생 수 대비 인턴 정원 비율은 156.3%로 전국 인턴 정원의 수도권 비중은 65.2%를 차	위원님의 지적처럼 의대 정원 증원은 우리 사회의 현안이라 연합뉴스TV에서도 기본적인 인력 부족, 필수 의료, 인턴, 지역 의료 등 세부 주제로 나눠 지속적으로 보도해 왔습니다. 인턴 자리의 지역 부족 문제도 심각해 통계 수치를 이용해 보도했는데 위원님의 말씀처럼 지역 현지 병원과 의

		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인턴 정원 비중은 영남권 77%, 호남권 51.8%, 충청권 51.7%, 제주권 42.2% 등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지역 의대의 수련 자리는 부족한 상황인데요, 모집하는 정원이 적으면 출신 대학의 지역을 벗어나 수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 의료 기반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보도는 단순히 통계 자료만을 인용해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 및 의사협회의 입장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내용을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 인턴, 의료단체 등의 인터뷰, 정부의 대책 등을 통해 보다 깊이 있게 현실을 전하고 해법 등을 제시하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의대 정원 문제가 지속되는 만큼 앞으로 더 심층적으로 이 문제와 해법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 12/24(일)	박세진	연합뉴스TV는 지난 18일,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17일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은 연속된 도발로 이러한 무력 도발은 한미 핵협의 그룹회의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17일 발사된 탄도 미사일이 570km를 비행한 것과 비교해 18일 발사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되어 1,000여km를 비행했다고 전하며,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대통령과 국가 안보실 주요 인사의 발언에 대한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소집된 긴급국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부가 북한에 즉각적으로, 직접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정부가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힌 것이 정치적 수사인지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 도발 대응은 북한 미사일 방어와 감시, 대응 체계 강화, 전략자산 전개, 대북 제재 부과, 국제 사회와의 협력, 특히 한미동맹 강

		안전보장회의에서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며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김태효 국가 안보실 1차장도 “북한의 도발이 이어진다면 한미 간에 필요한 조치, 한국과 미국이 각자 할 수 있는 조치, 한미일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히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들이 강력한 대응을 천명한 것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당연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이러한 발언이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으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언이 정치적인 수사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거 유사 발언과 대응 사례를 함께 살펴보며, 어떠한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고 해당 조치가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후속 보도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와 한미일 협력 강화 등 조치와 연결돼 있습니다. 물론 이전 진보 정부 때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해법 추구에 방점을 둔 데서 보듯 정권마다 북핵 해법의 중심축이 서로 다른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정부의 대응이 수사가 아니라 실질적 행동과 계획으로 연결된 것인지, 또 이런 조처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주시하겠습니다.
2023 12/31(일)	임윤주	연말을 맞아, 한 해를 돌아보는 뉴스들이 많이 보도됐습니다. 좋지 못한 소식들에 안타까운 마음도 드셨을 텐데요.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보도 하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뉴스24> 보도	이 기사와 관련해선 홍보수석의 언급을 전하는 단신 기사와 별개로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관련 뉴스도 별도 단신으로 처리

		내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공공데이터 평가 4회 연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에서 OECD 공공데이터 평가 결과 보고서를 인용하며, 1점 만점에 0.91점으로 40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민간과 적극 정보 교류를 해온 점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국민에게 필요한 고품질 공공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OECD 가입국과 관련한 보도에서 우리나라와 관련한 소식은, 사실 좋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도 '노인 빈곤율', '국가총부채', '긴 근로시간', '탄소세율 하락률' 등 부정적인 지표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연이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본 보도는 나름 긍정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브리핑 내용만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평가 지표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각 지표에서의 좋은 점수들이 어떤 함의를 띄고 있는지가 덧붙여졌다면, 활용도 제고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첫 1위를 한 것이 아니라 4년 연속 1위여서 별도 리포트로는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의 경제 성적이 OECD 국가 중 그리스에 이어 2위"라고 분석한 결과도 기사로 처리했습니다. OECD 국가와 비교하는 기사의 경우 우리나라에 좋은 내용이든, 부정적인 내용이든,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처한 위치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또 말씀 주신 것처럼 유의미한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분석을 좀 더 세밀하게 전달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박세진 시청자평가원(23. 12. 03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627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지난달 22일 우리 정부는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에 북한이 반발하며 사실상 합의파기를 선언했는데요. 이후 남북이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GP 복원에 나서는 등 군사분계선 일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의 보도를 통해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7일 국방부는 "북한이 군사분계선 1km 내에 있는 감시초소 GP의 시설물들을 복원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감시소 등 GP 시설물을 목재로 임시 복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9.19 군사합의로 인해 철수한 무반동총이나 고사총 등의 중화기도 다시 들여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서해 북방한계선, NLL 지역에 있는 북한군 갱도형 해안포의 개문 사례도 평소 1~2건에서 최근에는 10건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대응조치에 나설 것을 예고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분석 보도도 이어졌는데요. 11월 29일 <뉴스포커스>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9일 뉴스포커스에서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번 사태를 다각도로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 교수는 9·19 군사합의에서 가장 상징성을 갖는 것이 GP와 JSA라고 설명하면서, 우리 군과 북한의 GP 복원이 군사합의를 되돌리는 과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정찰위성에 '만리경 1호'라고 이름 붙인 것은 앞으로 유사한 위성을 계속 쏠 가능성을 시사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의 기술 협력을 우려하면서 이는 우리나라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할 태도에 대해서도 짚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을 제한해야하도록 한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국들과 힘을 합쳐 북한과 러시아를 규탄하고 동시에 제재를 발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가 5년 만에 완전히 파기되면서 북한이 군사도발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선 보도에서 살펴보았듯 도발은 북한이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 대담을 통해 앞으로 후계자 작업에 들어간 북한의 내부 분위기와 앞으로의 행보를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까지 다룬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보도에서 GP 복원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의 주요 내용을 그래픽으로 간략하게 설명한 점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대개 보도에서 그래픽을 활용하는 경우는 시청

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함인데요, 많은 내용을 압축해 전달하기 위해 간결하게 표현하다 보니 오히려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북한 위성 발사와 관련한 외신 보도도 함께 짚어보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전 세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외신에서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등을 함께 전했다면 시청자들도 보다 폭넓게 사안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2030 세계박람회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달 28일 저녁부터 29일 새벽 결과 발표 시까지 생중계를 통해 개최후보지 부산 현지의 반응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보도에서는 4시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유치 응원전 열기를 전하면서, 이번 행사에 1천여명이 참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2014년 부산시가 최초로 엑스포 유치 의사를 밝힌 이후 다섯 달 만에 139만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면서, 엑스포 유치는 부산 시민의 9년 간의 노력이 담긴 염원이라고 전했습니다.
결과 발표 이후 이어진 보도에서는 이번 정부 들어 엑스포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벌였던 500여일의 여정을 정리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작년 7월 엑스포 유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유치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어 정부와 재계가 막판 역전극을 노리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유치전을 위해 누린 거리가 지구495바퀴에 해당하고, 만난 인사가 수 천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정부와 재계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는 보도였습니다. 또한, 부산에서도 139만 명이 서명에 동참할만큼 시민들의 열정이 대단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연합뉴스TV는 부산의 유치응원전 현장 분위기과 함께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엑스포 유치를 바라는 부산 시민들의 간절함을 시청자들에게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유치를 위해 공을 들인 기간이나 참여 인원 등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한 점은 시청자들이 유치 노력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어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엑스포 발표까지 500여 일에 걸친 정부와 재계의 노력을 하나의 기사로 정리한 것에 비해 9년 동안 엑스포를 기다리고 준비해온 부산시와 시민들의 노고에 대한 부분이 작게 다뤄진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엑스포 유치전을 돌아보고 평가해 보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엑스포와 같은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또, 큰 이벤트에 가려져 후순위로 밀려난 주요 과제들은 없는지 등 국제적인 행사의 밝은 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여러 각도에서 이슈를 살펴보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달 초 경찰청이 추가근무 자제령을 내린 데 대해 최근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연합뉴스TV는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소개하며, 초과근무 자제령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초과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으로 인건비 총액의 약 88%가 집행된 상태입니다. 이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 집회 및 시위가 늘고, 잼버리와 같은 대규모 행사 등으로 경찰 인력 동원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연말연시에 방범 활동 증가와 연가자 발생 등으로 인력 공백이 생기는데, 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치안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일시적 자제 요청이라며, "연말 치안 공백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예산 부족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초과근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흉악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국민들의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 방범 활동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 공백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연말 모임과 행사로 밤늦은 시간까지 시민들의 활동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시의 적절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잼버리 같은 대형 이벤트 등 예년과 달리 새로이 발생한 이슈로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치안 공백 우려에 대한 경찰청의 입장을 함께 전해 균형 있게 전달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덧붙여 올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앞두고 나온 보도인 만큼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를 넘어 예산안으로 주제를 확장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문제 제기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후속 보도를 통해 이 사안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민 치안에 구멍이 생기진 않았는지 감시자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합니다.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3. 12. 10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628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지난 주 연합뉴스TV는,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한 화재로 11명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안전 수칙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이 되면 건조한 날씨에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판자촌이나 비닐하우스 가옥은 화기에 더 취약하다면서 화재 위험에 대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연말연시를 맞아 진행되는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있었다고도 전했습니다.
지난 주 첫 소식은 지난 3일 뉴스10인데요, 기존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했다며, 교육부가 책임을 함께 규정한 학생 구성원 조례 예시안을 공개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교권 침해가 잇따르자 교육당국이 내놓은 조례 예시안에 대해 교육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데요,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에 치우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를 강조한

데 반해 책임이나 의무는 간과하여 학생 인권과 교권 간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계와 논의 끝에 학생의 책임을 더한 학교구성원 조례 예시안을 공개했는데요, 학생은 교원의 교권 등 모든 학교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자도 교권과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시안을 안내받은 시·도교육청이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조례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 인권이 중심인 만큼 권리 후퇴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권리 조항과 책무성 조항이 있는데 권리 조항을 후퇴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교원단체는 예시안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교육활동에 갈등관리가 추가되는 등 교사 업무가 늘어날 여지가 있어 신중히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교육부와는 별도로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등은 학생의 책무를 담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교권침해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와 학부모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고려하여 균형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되, 교육과정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은 좀 더 분명하게 집고 갈 부분으로 보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교사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지자체별로 개별적인 교육환경과 상황을 고려한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 간의 협력과 학계,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개선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를 보호하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라는 점도 꼭 집을 부분이었습니다.
지난 3일 일요와이드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121건이고 이 가운데 11명이 목숨을 잃었다는데요, 전기차 화재 사고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안전 수칙을 기자가 전했습니다.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 운전자들도 화재를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돌 후 화재를 걱정한다는 응답이 29.3%, 충전중 화재는 21.1%로 응답자 절반이 화재를 가장 걱정했는데요, 전기차 화재 사고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안전 수칙을 기자가 전했습니다.
전기차는 하부 배터리팩이 강한 충격을 받을 경우 화재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의심되면 미리 점검을 받으라고 하면서, 경미한 화재는 주변 소화기를 통해 진압가능하지만 차량 하부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등 배터리 화재가 의심되면 빠르게 대피해야 하고, 119에 신고하고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났다면 위치 정보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차량 안에 있는데 화재가 났다면 문을 열어야 하는데요, 전기차의 문 손잡이가 매립형이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 한쪽 끝을 누르고 잡아당기라고 합니다.
김효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은 전기차는 문열림 방식이 기계식 또는 전자식 방식이 있으니 사용자 매뉴얼에 있는 비상시 문 여는 방법을 꼭 미리 확인하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사고시엔 문이 부서져 아예 열리지 않을 수 있어서 차량 내에 비상탈출 망치를 구비하고 급할 땐 창문을 깨고 나와야 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 운전자들도 화재를 크게 걱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안전 수칙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강조한 지침들은 전기차 운전자들에게 필수적인 안전 지식으로, 전기차 화재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전기차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안전 수칙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며, 시청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매우 적절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기차 주행 중에는 배터리 온도와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과열이나 이상을 감지하면 주행을 중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충전 중에도 배터리 주변 환경을 주시하고 이상한 냄새나 연기를 감지하면 충전을 즉시 중단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하면 더욱 풍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일 뉴스프라임에서는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됐다면서, 겨울철이 되면 건조한 날씨에 화재도 자주 일어난다면서, 판자촌이나 비닐하우스 가옥의 위험성을 전했습니다.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겨울이 무섭다는데요,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올해 1월 발생한 큰 불로 집이 다 타버려 임시로 집을 지었는데요, 합판과 스티로폼으로 비닐하우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화재로 가건물 형태의 주택 60채가 재로 변했는데요, 전기장판이 망가져 연탄에만 의존하는데, 그마저도 많지 않아 아껴 사용한다고 합니다
판잣집이 '떡솜'으로 불리는 솜뭉치나 비닐 등 불에 잘 타는 소재로 지어져 있어 불이 나면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는데요, 소화전도 설치돼 있지만 화재를 진압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마을에 설치된 소화장비함은 문을 열어보니 안에 호스는 있지만 주변에 물이 나오는 장치가 없어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땐 무용지물입니다. 마을이 생긴 이래 잊을만하면 찾아오는 화마에 주민들은 겨울이 두렵기만 하다고 합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화재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자체가 조속히 나서서 어떤 일이라도 해야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한파가 시작되면서 판자촌과 비닐하우스 같은 취약한 주거지역에서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런 집들은 화재 위험이 높은 재료로 만들어져 있어, 대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민들에게 화재로부터 안전한 장소와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면 소화 장비를 사용하기도 어렵고, 마을 주민들은 스스로 불을 끄려고 노력하지만, 부족한 장비와 시설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우선 이러한 지역 주민들에게는 화재 예방 및 대처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민들에게 화재 위험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부분도 강조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소박한 환경에서 사는 주민들과 함께 지역 사회가 더 안전하고 지원받을 만한 곳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멘트가 있었으면 좀 더 유익한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1일 뉴스리뷰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진행되는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있었다면서, 추워진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선 이웃을 생각하는 얼굴 없는 천사들의 기부 행렬이 벌써부터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열렸는데요, 셋, 둘, 하나! 버튼을 누르자 수은주가 빨갛게 차오릅니다. 올해 목표액은 4,349억 원으로 작년보다 300억 원 가량 높다고 합니다.
빨간색 손모아 장갑이 '사랑의 온도탑'으로,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수은주도 1도씩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내년 1월 말까지 진행되며, 겨울 길목에 바짝 다가선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나눔의 손길이 벌써부터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27일 전북 완주군 비봉면에는 20㎏짜리 쌀 다섯 포대가 전해졌는데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이 얼굴 없는 천사는 벌써 6년째 이곳에 직접 수확한 쌀을 기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북 정읍시 연지동에 사는 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평생 모은 4천만 원을 주민센터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날은 추워졌지만,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따스하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은 추운 겨울철, 사회 곳곳에서 이어지는 따뜻한 나눔의 행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사입니다. 올해의 목표액이 전년대비 300억 원 증가한 4,349억 원으로 설정된 것은, 나눔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사랑의 온도탑'이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수은주가 1도씩 올라가는 방식은 기부의 진행 상황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며, 참여와 동기 부여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전북 정읍시의 한 기초생활수급자가 평생 모은 4천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한 사례

는,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더라도 나눔의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나눔의 행렬은 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온기를 느끼게 합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눔의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안지연 시청자평가원(23. 12. 17.방송):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629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최근 사업주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수습 워킹맘에게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채용을 거부했는데요, 대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난 10일 일요와이드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2008년부터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2017년 새 용역업체는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오전 6시부터 시작되는 초번 근무 및 공휴일 근무를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는 이를 거부했고 회사는 근태 점수 미달의 이유로 채용 거부 의사를 통보했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는 근로자가, 2심에서는 사업주가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회사의 채용거부 통보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자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상 인정되는 초번, 공휴일 근무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지적과 회사의 채용 거부 통보의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구체적 내용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는 대법원의 평가를 덧붙였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출산을 꺼리는 원인을 찾기 위해 다양한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양한 원인 가운데 경력 단절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여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도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전달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은 근로자에게는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의미있는 첫 판례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사업주의 부담이 크게 작용해 여성의 일자리를 더욱 좁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OTT 서비스가 다양해진만큼 소비자들은 복수의 서비스를 구독하는 행태가 나타나면

서 구독료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OTT 서비스가 줄줄이 요금을 인상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먼저 지난 11일 보도에서는 넷플릭스를 포함한 OTT 요금의 줄인상 소식을 전하면서 구글도 광고 없이 보는 유료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의 구독료를 42.6% 인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약 50%의 요금을 올려 이용에 부담감을 느낀다고 전하면서 재이용을 할 경우, 가격적인 측면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유튜브 프리미엄은 한국만 유독 높게 책정되어 있어 비교적 저렴한 구독료를 지불하는 국가로 우회하여 가입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시민은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보다 우리나라가 요금이 비싸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12일에는 이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더욱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전문가는 OTT 서비스의 가격 인상 배경에 대해 유튜브처럼 상위권에 있는 플랫폼의 경우 시장 지배력이 확대를 방패 삼아 가격을 인상했고 반면, 하위 사업자들은 그동안 누적된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생존을 위해 금액을 올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경우 다른 국가들보다 국내에서의 요금과 인상 폭이 모두 커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 없이 경제 상황이나 환경에 맞춰 인상했다고 설명할 뿐 납득할 만한 합당한 설명도 내놓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플랫폼에 잡혀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요금 인상으로 OTT 서비스 해지가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유튜브의 경유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시청은 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 지속 이용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나 티빙 등의 일반적인 OTT 서비스 하나를 선택해 구독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보도에서 살펴본 것처럼 OTT 사업자들의 생존을 이유로 서비스 구독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지금의 상황은 초기에 시장 진출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을 유인하고 이 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을 방패로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해할 만한 명확한 이유 없이 요금 인상을 통보하다보니 반발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이 보도는 OTT 서비스 구독료 인상의 원인에 대한 배경과 이유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서비스를 이용자의 의견과 전문가의 견해를 다루면서 현상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사업자의 입장도 함께 전한다면 시청자들이 이에 대한 내용을 더욱 심도있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 영화는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만큼 그 주목도가 높은데요,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이에 대한 보도들이 이어졌는데요, 뉴스프라임의 보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서는 영화 '서울의 봄'의 흥행으로 인해 군사반란에 맞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다 고인이 된 고 김오랑 중령과 정선엽 병장을 추모하기 위한 발길이 이어졌다고 전하면서 이들은 지난해 순직자에서 전사자로 정식 분류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영문도 모른 채 계엄사령관 체포 작전에 동원되었다가 숨진 고 박윤관 상병은 순직상태로 남아있어 역사적 재평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뉴스현장에서는 이 영화의 흥행 요인과 그 의미를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전문가는 영화에서 표현된 장태완 장군의 발언과 참모총장이 잡히게되는 장면, 국방부 장관이 잠옷 바람으로 택시를 잡는 장면 등을 통해 역사적 고증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복장, 주연 배우의 분장 등이 디테일하게 표현되어흥행을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영화 흥행의 한 가지 특징은 젊은 층에서 크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교과서의 내용을 영화가 굉장히 생생하게 재현해냈을 뿐만 아니라 SNS에서는 심박수 챌린지가 등장할 만큼 공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분노하는 2030을 자극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화를 관람하는 것을 넘어 12·12 군사반란과 관련된 다양한 영상을 찾아본다거나 관련 서적 등을 통해 현대사를 학습하는 현상도 등장했을 만큼 단지 영화의 엔터테인먼트적인 부분만 부각된 것이 아니라 에듀테인먼트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는 우리 사회에서 생각해 볼 만한 의제를 제시해줍니다. 특히, MZ세대로 대변되는 젊은 세대의 경우 실제 경험한 것이 아니라 교과서를 통해 학습하는 것이 많아 현대사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면 그 의미를 되짚어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앞서 살펴본 보도와 대담을 통해 12·12 군사반란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사회적 관심의 증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영화 소비를 넘어 학습의 욕구를 일으키고 있다는 설명을 통해 영화가 지닌 의미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보도 당일이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난 날인 만큼 이에 대한 영화의 흥행 요인을 부각하기보다는 역사적 의미 등 초점을 맞췄다면 더욱 의미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 인력의 증가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역의대를 졸업한 젊은 의사들은 인턴 자리가 부족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13일, 뉴스현장에서 다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의대 졸업생 대비 모집하는 인턴 정원 비율의 지역 간 차이가 컸다고 전했습니다. 10년 동안 수도권의 의대 졸업생 수 대비 인턴 정원 비율은 156.3%로 전국 인턴 정원의 수도권 비중은 65.2%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인턴 정원 비중은 영남권 77%, 호남권 51.8%, 충청권 51.7%, 제주권 42.2% 등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지역 의대의 수련 자리는 부족한 상황인데요, 모집하는 정원이 적으면 출신 대학의 지역을 벗어나 수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 의료 기반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보도는 단순히 통계 자료만을 인용해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 및 의사협회의 입장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내용을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박세진 시청자평가원(23. 12. 24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630회-'연합뉴스TV를 말한다'>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이어지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국방을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는 물론,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주요 인사까지 나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의 보도를 통해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18일,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17일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은 연속된 도발로 이러한 무력 도발은 한미 핵협의그룹회의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17일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570km를 비행한 것과 비교해 18일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되어 1,000여km를 비행했다고 전하며,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최고 고도가 6,000km 이상이 될것이라는 일본 방위성의 분석을 함께 전하며, 30에서 45도의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최대 사거리가 1만 5,000㎞에 달하는 화성 18형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끝으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를 고려했을 때 17일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미주리함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며, 18일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번 보도는 시의적절했다고 평가되며, 사거리 분석을 통해 북한의 의도를 평가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이번 도발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덧붙여지지 않은 점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지난 14일,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는데 두 나라의 군용기가 동시에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군용기 도발을 사전에 논의했을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인 공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과 중국 및 러시아의 군용기 도발을 연계해 분석해보고 향후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을 함께 짚어 보았다면 시청자들이 동북아시아 안보 정세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번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주요 인사의 발언에 대한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소집된 긴급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며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한미핵협의그룹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북한의 도발이 이어진다면 한미간에 필요한 조치, 한국과 미국이 각자 할 수 있는 조치, 한미일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들이 강력한 대응을 천명한 것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당연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이러한 발언이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으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언이 정치적인 수사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거 유사 발언과 대응 사례를 함께 살펴보며, 어떠한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고 해당 조치가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후속 보도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국방부가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군대 식단이 뷔페식으로 바뀌고, 군용 모포 대신 이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연합뉴스TV의 보도를 통해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방부는 취사병들에 의해 1식 3찬이 제공되던 과거와 달리, 민간 조리원에 의해 만들어진 10개 이상의 메뉴가 제공되는 식단이, 내년부터 13개 부대에 시범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정한 배식을 위해 정해진 양을 나눠주던 조리병의 모습이 사라지고, 장병들이 직접 먹을 만큼의 양을 담아가는 형태로 변화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군 부대 인근 지역업체에서 1끼 1만 3,000원 수준의 외식, 배달, 푸드트럭 등으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상생 장병특식'이 매달 시행되며, 모포와 포단

이 사라지고 이불이 보급될 예정입니다. 군 내부 시설에서 세탁했던 전역자의 침구류도 일괄 회수해, 전문 세탁업체에 맡겨 신병에 보급하는 사업이 새롭게 추진되며, 소재와 모양을 개선한 수통 교체작업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가 방위에 헌신하는 장병들의 복무 환경이 개선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되며, 국방부의 다양한 조치를 자료화면을 활용해 설명하고, 현역 장병들의 인터뷰를 덧붙여 보도함으로써 변화할 병영 환경의 모습을 잘 전달한 보도라고 평가됩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장단점을 함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민간 조리원을 확대할 경우 장병 급식의 질이 개선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유사시 접적지역에서 취사할 숙련된 조리병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불의 경우에도 부피가 커 휴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쟁 발발시 장병들에게 모포를 다시 나눠줘야 하는데 이를 보관하는 장소와 관리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고,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재불출을 위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장병 복무 여건 개선은 환영할 일이지만 군이 존재하는 본연의 목적은 전쟁을 수행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률이 급감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심화되는 저출산 추세를, 국가의 존립이 달린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내년을 저출산 극복 원년으로 삼아 특단의 대책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고, 인천광역시는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출산 장려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결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의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17일,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구수 감소에 따른 문제가 가장 심각한 분야는 국방으로, 해외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병력 부족으로 인해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병력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군이, 보충역을 줄이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저출산'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내지 않는 한 병력 부족 해결은 요원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병력 감소에 따른 현실적인 대비책은 복무기간을 늘리는 것이지만 이미 단축된 복무기간을 다시 늘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인구수를 늘리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정치권은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며, 여성징병제 및 모병제 도입 등 병역 제도의 개선과 함께 장기적인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합계출산율과 병력 규모는 각각 1.8명, 128만여 명으로 우리의 두 배를 훨씬 뛰어 넘는 수준입니다. 첨단무기를 도입해 인력 공백을 메우려는 노력이 시행되고 있

지만 결국 전쟁은 사람이 준비하고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간 군사적 대립이 심화되고, 북한의 도발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병력 부족 문제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어 준 의미 있는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보도를 통해 대책마련에 미온적인 정치권을 비판하며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한 만큼 국회가 실질적인 조치에 조속히 돌입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 임윤주 시청자평가원(23. 12. 31.방송):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631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원샷>

연말을 맞아, 한 해를 돌아보는 뉴스들이 많이 보도됐습니다. 좋지 못한 소식들에 안타까운 마음도 드셨을 텐데요.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보도 하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뉴스24> 보도 내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공공데이터 평가 4회 연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에서 OECD 공공데이터 평가 결과 보고서를 인용하며, 1점 만점에 0.91점으로 40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민간과 적극 정보 교류를 해온 점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국민에게 필요한 고품질 공공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OECD 가입국과 관련한 보도에서 우리나라와 관련한 소식은, 사실 좋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도 '노인빈곤율', '국가총부채', '긴 근로시간', '탄소세율 하락률' 등 부정적인 지표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연이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본 보도는 나름 긍정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브리핑 내용만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평가 지표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각 지표에서의 좋은 점수들이 어떤 함의를 띄고 있는지가 덧붙여졌다면, 활용도 제고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통계청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지표 체계를 개발하여 공개한 바 있는데요. 새로운 통계지표 체계에 대해 전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통계청이 개발 중인 저출산 관련 통계지표 체계에 대해 전했습니다.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보다 입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지표 개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본 지표는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던 통계 지표들을 크게 세 영역으로 분류해 유기적으로 재구성한 것인데요. 출산 현황, 출산 현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출산 현황과 결정요인에 영향을 주는 가족정책,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됐습니다. 본 지표의

지표별 정의와 해설, 시계열 결과 등은 통계청 지표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는 지표 일부를 소개하기도 하였는데요, 결혼에 대한 견해 지표를 살펴보면, 청년층에서는 결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절반을 넘었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꼭 낳지는 않아도 된다는 응답 역시 미혼남녀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 외에도 결정요인에 해당하는 가족형성 조건 관련 지표를 살펴보며, 청년층 평균 임금, 청년들의 가치관 및 인식 등을 확인했습니다. 가족 정책 영역에서도 사교육비나 육아휴직 지표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통계청은 기본적인 구조는 유지하되 세부적인 지표를 추가·보완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 당시 처음 공개된 지표인 만큼, 해당 지표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었는데요. 앵커와 기자가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상세하게 보도하여 전달력이 높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지표 구성에 대한 설명은 물론, 어디에서 해당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지도 화면과 리포팅을 통해 여러 번 전달되었습니다.
본 지표는 약 8개월 전 개발 계획을 발표했던 것으로, 일부이긴 하지만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가 언급한 바와 같이, 저출산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실질적인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향후 최종안에 대해서도 확인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근로시간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보도한 <뉴스14>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은 사업자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었는데요, 대법원은 사업자의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각 판결 근거를 살펴보면, 항소심 법원에서는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각각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한 값이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했는지 따졌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근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 근로 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하루 근무 시간과는 무관하게, 1주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한 값이 총 52시간에 달하는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무 시간과 관련한 논의는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것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의제입니다. 때문에 본 보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1, 2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의 차이점을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잘 보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뿐 아니라 자료 화면 및 자막 등에서도 전달력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둘러싸고 제기될 수 있는 다른 논의들에 대해서는 전문가 대담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뉴스현장> 살펴보겠습니다.
대담은 변호사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는 판결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기 전, 사실관계를 먼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은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였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당사자와 합의가 있을 경우 연장근로가 가능한데,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로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이러한 연장근로 초과 시간을 따지는 계산 기준이 쟁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1일당 한도에는 제한이 없다는 근거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기존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뒤집은 것인데요, 변호사는 앞으로 고용노동부 역시 이러한 대법원의 해석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노동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재계에는 근무 유연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환영하였고, 노동계에서는 근로기준법 마련의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며, 근무자 건강권 훼손 등을 우려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서도, 법과 관련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을 설명할 때에는 일자별로 노동자의 시간을 전달하는 한편, 판결을 설명할 때에는 변호사 본인이 연장근로와 관련해 법을 공부해왔던 사례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판결이 그간의 행정해석과 매우 상이하게 해석되었음이 잘 전달되었습니다. 판결을 두고 엇갈리는 반응에 대해서도 전달하여, 향후 해당 판결이 가져올 주요한 논의 지점을 시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유모차 판매량 상승과 관련하여 다각도로 살펴본 <뉴스현장> 대담 살펴보겠습니다.
대담은 소비자학과 교수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국내 한 온라인 오픈마켓 조사결과를 인용하며, 2023년 반려동물용 유모차의 판매 비중이 아기 유모차 판매 비중을 추월했다고 전했습니다. 2022년 대비 아기 유모차 판매는 20% 감소, 반려동물용 유모차 판매는 20% 증가한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소비 패턴의 변화 원인으로 가장 먼저 저출산 현상에 대해서 논의되었는데요. 출산율 0.72명으로 전세계 최하위국이라는 사실이 유모차 판매 하락과 같은 직관적인 소비 수치로도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현재는 국민 4명 당 1명 꼴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외 육아용품은 중고거래로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과, 육아용품의 고급화, 육아 관련 물가 상승 등 다양한 소비 현상 및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반려동물 유모차 판매량 증가와 아기 유모차 판매량 감소 현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특히 소비 패턴을 통해 사회적인 문제를 짚어보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대담 보도였습니다. 펫미족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용어나, 텐포켓 키즈 등 현재 육아 현상을 보여주는 용어 설명을 통해 현재 사회의 모습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육아용품 중고거래 비중 증가와 관련하여서는 '현명한 소비' 등의 수사적 표현을 통해, 이후 이어진 유아용품 고급화 및 육아 물가 관리에 대한 지적이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표 방송스틸컷

일시/장면설명	일시/장면설명
2023년 12월 3일 03시 40분/ 박세진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2023년 12월 10일 03시 40분/ 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일시/장면설명	일시/장면설명
2023년 12월 17일 03시 40분/ 안지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2023년 12월 24일 03시 40분/ 박세진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일시/장면설명	
2023년 12월 31일 00시 20분/ 임윤주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